

‘윤장현 4억5000만원’ 건설사 회장·은행 2곳서 조달

윤 전 시장 빌린 1억원 차용증 없고 재산신고 포함 안돼 검찰, 업무 연관성·대가성 등 조사...대출 적정성 여부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가짜 권양숙'에게 뜯긴 4억5000만원의 출처가 확인됐다. 윤 전 시장은 은행 2곳에서 3억5000만원을 신용대출 받았고, 나머지 1억원은 M건설(주) P대표이사 회장으로 부터 빌렸다.

16일 전남지방경찰청과 광주지검, 은행·건설업계 등의 말을 종합하면 '권양숙 여사' 사칭법 김모(여·50·구속)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윤 전 시장에게 '권양숙이다. 딸 비즈니스 문제로 5억원이 급하게 필요하게 됐다.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내용의 첫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들은 이후 수차례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이후 윤 시장은 지난해 12월 26일 모 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아 본인명의로 김씨가 알려진 계좌에 이체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P회장으로부터 빌린 현금 1억원을 자신의 비서에게 지시해 비서명의로 무통장 입금했다. 이어 올 1월 5일과 1월 31일에 앞서 2억원을 대출받은 은행 등 시중은행 두 곳에서 각각 5000만원과 1억원을 대출받아 본인명으로 송금했다. 윤 시장이 보낸 돈은 모두 김씨 어머니 계좌로 입금됐다.

검찰은 최근 P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억원을 빌려준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P회장은 "윤 전 시장이 급히 쓸 돈이 있다고 해 1억원을 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도 앞선 검찰조사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렸다"고 진술했다. 이들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는 차용증은 없었으며, 이자도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은 또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에 따

른 신고내역(지난 3월 기준)에도 P회장에 빌린 1억원을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도 일단 윤 전 시장과 P회장의 진술에 따라 1억원을 개인간 구두계약을 통한 단순채무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P회장은 지난 6일 광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윤 전 시장에게) 연락을 받은 적도, 돈을 준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으나, 이날 통화에선 '윤 전 시장에게 1억원을 빌려준 사실'을 묻는 질문에 "네, 네, 다음에 만나서 얘기합시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시장이 돈을 빌린 시점이 시장 재직시였다든 점에서 업무상 연관성이냐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업무상 연관성 부분이다. 당시 M건설이 광주시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했다면 업무상 연관성 부분이 인정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되면 공직자인 윤 전 시장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빌린 1억원도 부당이득으로 인정돼 국고로 환수된다. 다만 건설업자인 P회장은 공직자 등의 직무 관련한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탓에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이 법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업무상 연관성에 이어 대가성 부분이 드러나면 '뇌물죄'를 적용받게 되는 등 상황이 복잡해 진다. 형법 제129조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대가성 여부는 향후 검찰수

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건설업자와 윤 전 시장이 개인적 친분을 의한 채권 채무관계라고 주장한다면 대가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법원도 대가성 인정 부분에 대해선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둘 사이에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돼 뇌물죄가 성립된다면 1억원은 몰수되며,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재산을 추징당하게 된다.

특히 이 경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제1항 제1호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벌금으로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윤 전 시장의 은행대출과 관련해서도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해당은행에서 관련 자료를 남겨받아 업무상배임과 직권남용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현직시장이 대출자적이 안되는데도 어떤 힘을 행사해 대출을 받았다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은행 담당자는 업무상배임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일부 은행권에선 현직시장으로 의료면까지 있는 윤 전 시장의 경우엔 별다른 채무 등이 없는 한 수뢰액의 신용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까진 6·13 지방선거 사법 공소시효 만료일(12월 13일)을 앞두고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 왔다"면서 "부정채용과 관련한 직권남용·업무방해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휴지통 있는데 버젓이...실종된 시민의식



16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의 한 빌딩 옆 공간에 일회용 커피컵 등 온갖 쓰레기가 버려져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50대女 의식불명케 한 봉침 시술자 징역 1년6개월

이른바 봉침(벌침)을 시술하다가 50대 여성을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성욱)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의료인 자격이 없는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B(여·58)씨의 팔

꿈지와 손가락에 벌침을 찔러 넣는 등 3회에 걸쳐 봉침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B씨를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3회째 봉침시술을 받은 직후 과민성소근에 따른 이상증세를 보였으며,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심정지를 일으켰다. B씨는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사지마비 상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3차 소송 항소심도 '승소'

법원 "청구권 시효 살아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 동원돼 강제 노역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소송은 1·2·3차로 나뉘어 진행 중인데, 앞서 1·2차에 이어 3차 소송에서도 미쓰비시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광주지법 민사합소 2부(부장판사 김성곤)는 "지난 14일 강제 동원된 김영옥(86)씨와 최정례(1944년 사망·당시 17살)씨의 조카며느리 이경자(75)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

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5월 제기된 이 소송에 대해 지난해 9월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1억2000만원과 325만여원(상속분 기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차 소송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간의 청구권과 책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2012년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원고들이 최근에서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 청구권 소멸 시효 기산점을 지난 10월 30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거문도 해상 유조선-어선 충돌 선원 11명 전원 구조

16일 새벽 5시 10분께 여수시 삼사면 거문도 남쪽 14.8km 앞 해상에서 제주로 향하던 유조선 A호(746t, 승선원 9명)와 조업 중인 어선 B호(139t·승선원 11명)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호의 어창(물고기 보관 창고)에 구멍이 생겨 침수됐으나, 출동한 해경과 주변 어선들에 의해 선원 11명 전원 구조됐다. 두 선박의 선장 모두 음주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두 선박이 서로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보고 항적도 및 승선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r

할머니 치고 뺑소니 20대 영장 화순경찰, 음주 여부도 조사

경찰은 16일 7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로 김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5일 새벽 0시 40분께 화순읍 땀터터널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회사소유 SUV차량을 몰고 가던 중 김모(여·7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김씨는 "바람을 쐬려 운전하던 중 고라니를 친 걸로 알고 그냥 지나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드러났다.

경찰은 운전자 김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음주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5300만원 든 돈가방 슬쩍 광양경찰, 50대 검거 조사

광양경찰은 16일 상가 주인들이 한 눈을 판 틈을 이용해 매출금이 든 바구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58)씨를 붙잡아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순천시 덕암동 재래시장의 한 수산물 도매상에서 5300만원의 돈가방을 몰래 들고간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모 등 전과 6범인 김씨는 상인들이 물건을 대금 등을 은행에 입금하기 전까지는 가방이나 바구니에 넣어둔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사료 경쟁업체 곤포 사일리지 훼손

○...소 사료 생산사 업체 뛰어난 50대 부부가 경쟁업체의 곤포 사일리지(가축 사료를 만들기 위해 볶고 미생물을 넣고 하얀 비닐로 싸놓은 것)를 커터칼로 훼손했다가 경찰서행.

○...1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52)씨 부부는 지난달 1일 오후 8시10분께 광주시 서구 덕흥동 일대 논에 있던 곤포 사일리지 403kg의 포장비닐을 커터칼로 찢어 121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는 것.

○...해당 곤포 사일리지는 소 사료 생산사공공체를 운영하는 이모(45)씨가 농가로부터 구매해 보관 중인 것으로, 김씨 부부는 경찰에서 "최근 소먹이 생산사업을 시작했는데 영업망을 장악한 이씨 때문에 폐업할 처지에 몰려 훔침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1566-9988

돈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돈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극장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J16 40 point	8 5 1
J10 20 point	1 6 5 2 4
J8 14 point	6 8 2 4 7 5 8 1
J7 12 point	2 5 1 6 4 9 7 8 3
J6 10 point	1 3 0 7 5 8 4 9 2
J5 8 point	2 4 6 3 7 1 2 8 0
J3 6 point	4 6 2 8 1 0 9 7 3
J2 5 point	5 7 6 2 1 4 3 0 2
J1 4 point	4 8 1 7 9 0 0 8
J1+ 3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